

주제
서평

중국의 귀환

'신냉전' 그늘 속 동아시아론의 고뇌

『중국 현대사를 만든 세 가지 사건: 1919, 1949, 1989』 백영서(2021), 창비

강진아 _한양대학교 사학과 교수



1. 머리말: 서평 읽기, 서평의 서평 쓰기

지난해에 한국 중국사학계의 원로이자 ‘방법으로서의 동아시아’, ‘복합 국가론’, ‘근대 극복과 적응의 이중과제’ 등 논쟁적 개념을 연이어 제기해 온 백영서 연세대학교 사학과 교수(이하 인물의 존칭은 생략)가 퇴임 후 첫 저작으로 『중국 현대사를 만든 세 가지 사건: 1919, 1949, 1989』(서울, 창비, 2021)이란 책을 선보였다. 이 책은 2021년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아 중국공산당과 중국의 진로와 미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출간

되었다. 그리고 학계에 적지 않은 서평이 쏟아졌는데, 필자 역시 잡지사 『창비』의 의뢰를 받아 서평을 썼었다(강진아 2021). 하지만 『창비』의 서평은 요청 분량이 매우 짧았고, 비평 부분은 몇 단락에 불과했다. 그런데 출판 과정에서 놀랍게도 편집위원회로부터 글을 고쳐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중국 비판이 집중된 부분이다. 자구뿐만 아니라 주장에 대한 반박 및 수정 요청이었다. 몇몇 자구를 고쳤고 문장을 뺐으나 논조는 유지했다. 이 에피소드는 현재 한국 사회와 진보 지식인 사회에서 중국론이 가지는 민감성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¹⁾

그에 자극을 받아 전후로 출간된 다른 서평들도 함께 읽으면서, 역시 한국 사회에서 중국과 동아시아를 읽는 농도 다른 시선들을 감지할 수 있었다. 부대끼는 시선들은 올해 2022년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아서 더욱 예민한 형태로 여러 학술 현장에서 드러났다. 필자는 동북아역사재단의 의뢰로 기관의 간행물인 『동북아역사포커스』 한중수교 30주년 특집 「한중수교의 회고와 전망」에 역사학 필진으로 글을 썼는데(강진아 2022b), 이곳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 한중수교 30주년뿐만 아니라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시진핑의 당주석 3연임과 장기집권이 가시권

1) 잡지사에서 보내 준 샘플 논문을 미리 봤더라면 감히 글을 쓰겠다고 수락하지 않았을 지도 모르겠다. 주제 서평이라는 형식을 잘 몰라서, 깊이 있고 학계 동향을 점치는 데 의미 있는 새로운 서평 문화를 선도한다고만 알고 있었기에 어쨌든 ‘서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막상 실렸던 글을 보니 필자가 올해 의뢰받아 썼던 『역사학보』의 「회고와 전망」처럼 한 분야의 최근 저술을 전체적으로 리뷰하는 연구사 정리에 가까웠다(강진아 2022a). 그에 반해, 이 글은 처음 의뢰해 주신 편집진께 제안드렸듯이, 한 책과 그 책에 대한 서평을 다시 평한 것이다. 참고문헌이나 논의의 폭에서 좁을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에 들어와 있는 시점이었다. 글은 중국이 바이든의 ‘가치동맹’을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한국과 아시아 주변 국가가 대안으로 선택 가능한 아시아의 ‘가치동맹’을 제안하려면, 베이징 컨센서스와 같은 자국 중심의 모델을 전파하기보다는 함께 ‘가치’를 만들어가야 한다, 거기에 한국과 일본의 서구-아시아 혼종형의 민주주의는 참고할 만하다는 주장이었는데, 역시 편집 단계에서 논조의 순화를 요청받았던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수록된 글은 필자의 견해이며 재단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다는 속표지 안내를 암전히 붙인 채 기고문은 무사히 나왔다.

솔직히 성의를 보이기 위해 자구는 조금 고쳤다. 하지만 연이은 이러한 한국 지식계 및 관계의 중국 문제에 대한 자기검열은 이례적이었다. 여론 조사에서 넘실거리는 대중적 혐증 정서와는 정반대의 숨죽이기이다.

다소 서두가 길었지만 백영서의 책과 서평들을 재독함으로써 우리 안에 1990년대 평화와 공영, 대안 사회의 담론으로 떠올랐던 동아시아론이 오늘날 신냉전 시대에 어떻게 자리하고 있는지, 그 안에 뚜렷이 모습을 드러낸 ‘중국의 귀환’이 여전히 던져주는 과제는 무엇인지 묻고 싶어졌다. 다행히 『기억과 전망』 잡지는 한국과 세계의 민주주의, 민주화 운동, 시민사회를 분석하고 진단하는 글을 실는 것을 발간 취지로 하고 있다고 하므로, 글을 풀어나가는 방식은 달라도 오늘날 한국 사회의 동아시아론을 진단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2. 저자와 텍스트

이 책과 동아시아 담론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저자의 학문적 여정을 간단히 소개하고 싶다. 저자는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에 72학번으로 입학했으나, 1974년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되어 학교에서 제적당하고 감옥에서 10개월 반을 복역하였다. 옥중에서 김지하의 소개로 출옥 후 리영희에게 사사 받으며 조교로 일하게 된다(최은진 2016, 6-7). 『8억인과의 대화』 출간 작업을 도왔으나 이 책으로 저자 리영희, 발행인 백낙청 등이 재판에 회부되었고, 재판 뒷수발을 하던 저자는 1978년부터 『창비』 기자로 일하면서 이후 40년 동안 창비 학술 활동의 중요한 성원이 된다. 『창작과 비평』 1979년 가을호의 제3세계 특집에 첫 공간 저술로 마오쩌둥 경제발전모델에 대한 비판을 리뷰하면서 연구와 운동을 결합한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듬해 박정희 사후 유화 조치로 대학에 복학할 수 있게 되었고, 1984년 서울대 동양사학과 박사과정에 진학, 한림대, 연세대 교원으로 임용되어 제도권 내의 학문 연구 이력을 시작하였다(최은진 2016, 12, 32).

석사논문은 민두기 선생의 권유로 5·4운동 시기에 국민당 급진주의자 주집신(朱執信)의 활동을 분석했으나, 한림대 교수 시절 학내에서 발생한 학생운동을 목도하고, 5·4운동 시기의 대학 문화를 박사논문 주제로 선택하였는데, 그 성과는 『중국 현대 대학 문화 연구』(일조각, 1993년)로 출간되었다(최은진 2016, 12-13, 34). 이렇게 운동과 제도권 사이의 경력을 한 차례씩 밀도 깊게 경험한 저자는 이후 『창비』를 지속적인 활동 무대로 삼아 두 세계를 아우르는 문필 활동을 하고자 하는데(최은진 2016, 13), 그 구체적인 실

천 방식이자 학술 주장으로 발신한 것이 동아시아론이다.

필자가 검토한 두 편의 인터뷰에서 백영서는 공통적으로 1990년의 미국 하버드 옌칭에서의 연구년과 학술 경험이 동아시아론을 구상하는 데 대단히 중요했다고 말하고 있다(김향 2011; 최은진·박철현 2016). 1970년대의 한국 좌파 지식인 사회에는 리영희를 비롯해 문혁을 ‘인류의 새로운 실험’으로 높게 평가하고, 서구 모델의 대안으로 스탈린식 소련 모델이 아닌 중국 모델을 근대를 넘어선 다른 방식으로 모색했었다. 중국을 선호한 이유는 국가 주도의 모델이 아닌 인민주의 요소가 있었던 것이 한국인의 정서에 맞았다고 저자는 설명한다(김향 2011, 102). 1980년대에는 운동권이 민주주의, 주사파 민족주의 노선으로 분화되면서 중국보다 북한 모델에 끌리고, 주사파가 주류가 되었다. 그런 가운데, 1989년 천안문 사태가 발생했다. 한국 운동권 내에서는 공산당이 그럴 리 없다는 공산당 무오류설을 주장하는 그룹까지 있었다(김향 2011, 92, 101-102). 이런 지적 환경 속에 있던 저자가 이듬해 1990년 하버드를 방문했을 때, 미국의 중국 이미지는 천안문 사건을 주도한 망명인들의 담론이 지배하고 있었다. 저자 본인의 표현을 빌자면, 당시 미국 사회는 문혁에서 천안문까지 수난사의 입장에서만 중국혁명을 보았다(김향 2011, 96). 중국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다시 강조하고 싶었을 것이다. 한편, 중국사를 하는 한국인에게 아무도 관심이 없고, 한국에 관해서만 묻는 상황을 겪으면서, 한국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지만 국제적 경쟁력과 독창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김향 2011, 117-118).

1970년대 중국 모델을 따라야 할 목적으로 삼았던 길에서 벗어나, 한국

사회를 연구자의 학문적 출발과 현장으로 삼아, 중국도 한국도 더 잘 볼 수 있는 방법으로, 더 크게 동아시아를 방법으로 삼자는 그룹이 생겨났다. 저자도 그 일원으로 1999년 ‘지적 실험으로서의 동아시아’를 주장했고, 2000년 『동아시아의 귀환』의 출간을 시작으로 ‘연동하는 동아시아’, ‘지적 실험/실천 과제로서의 동아시아’, ‘이중적 주변의 시각’, ‘복합국가’, ‘핵심 현장’, ‘지구지역학’ ‘사회인문학’ 등의 개념을 제시하면서 한국 사회의 동아시아 담론을 이끌었다(김항 2011, 114). 역사 연구에서는 단지 동아시아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국사의 틀을 벗어나 동아시아가 서로 연동하는 현상에 주목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한국 사회의 변혁론 구상에서는 근대 혹은 가장 근대적 현상인 국민국가를 ‘적응’하면서 동시에 ‘극복’하기 위해 백낙청이 제시한 ‘복합국가’ 주장을 이어받았다(김항이혜령 2011, 119). 동아시아론에 관해서는 이미 수많은 비평이 있고, 필자 역시 쓴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설명해도 충분할 것 같다(강진아 2009; 박경석 2018).

이제 책의 내용을 저자와 서평자의 목소리로 간단히 요약해 보자. 이 책은 중국의 근현대 100년 역사를 1919년 5·4운동,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 1989년 천안문 민주화운동 세 사건을 축으로 자율적인 민중이 역사의 주체로 만들어지고 결집하여[‘민(民)의 자치와 결합’], ‘헌정의제’의 실현을 목표로 추구해 나간 과정으로 서술한다. 그 과정은 ‘근대 적응과 근대 극복의 이중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헌정의제’란 저자가 명·청대 이래의 장기 지속된 과제를 의미하는 중국사학자 필립 쿤(Philip A. Kuhn)의 개념을 빌려온 것으로, 민의 정치참여의 확대 및 국가의 권한 및

정통성 제고라는 두 가지 요구를 함께 충족시키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백영서 2021b, 136).²⁾

여기에서 헌정의제와 근대성은 어떻게 연결되는가. “각성된 개인의 사회개혁 통로인 소단체 및 직능별 대표로 구성된 국민회의 구상과 운동, 연합정부와 혼합경제의 신민주주의, 1950년대 이래 민간 차원에서 추구된 ‘사회주의 민주’가 굴절되면서도 이어진 1989년의 밑으로부터의 민주자치”(백영서 2021a, 379)가 중국의 ‘새로운 민주주의’, ‘헌정의제’의 주요 성과인데, 서구 근대에 적응하면서도 극복하는 새로운 모델을 모색하려는 노력이었다. 물론 그 과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지금도 그 모델은 모색 중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이 책이 나오기 얼마 전에 저자가 엮은 『백년의 변혁: 3·1에서 촛불까지』(창비 2019)는 저자가 말하는 ‘민의 자치와 결집’이 무엇인지 힌트를 준다. 저자는 이 책에서도 ‘3·1에서 촛불까지’ 100년의 “점진적이고 누적적인 성취의 변혁과정”을 추적하면서, 키워드로 독립, 민주, 분단체제 극복, 평화, 동아시아 그리고 공동체를 꼽았다(김정인 2020, 414). “촛불항쟁으로

2) 필립 쿤이 말한 19세기 이래 중국 사회가 추구한 ‘헌정 의제’란, 첫째 정치참여를 아래로 확대하면서도, 동시에 국가의 권한과 정통성은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둘째 정치 경쟁과 공공 이익 사이의 조화, 셋째 중앙 국가 권력의 조세원 확충 요구와 개별 지역 사회의 재정 지출 요구 사이의 조화를 이루는 과제였다(이상훈 2022, 2; 필립 쿤 2009). 이순이는 저자의 개념이 쿤의 핵심 개념을 빌렸으나 한계를 넘어섰다고 평가했는데, 그 근거는 쿤은 1949년의 획기성을 근대국가 체제의 수립이란 차원에서 지적했을 뿐이나, 저자는 인민혁명의 성격을 강조하여 변혁 주체의 성격과 의미를 조명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순이 2021, 184-186, 각주 4).

실현된 남한의 정권교체가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으로 이어지고 한반도 전역에 걸친 민중역량의 비약적 증대를 이룬다면 이는 ‘혁명’의 이름에 전혀 손색이 없을 것”(백영서 2019, 10)이라는 서술에서, 1919년 3·1운동을 지금도 지속되는 미완의 과제인 향후 ‘혁명’의 출발점으로 삼은 것처럼, 중국의 100년 역시 아직 미완인 ‘근대 적응과 근대 극복의 이중과제’를 완수할 ‘새로운 민주주의’와 ‘헌정의제’를 내용으로 하는 대안 모델 찾기의 점진적 누적적 과정으로 해석하는 것이리라. 저자 스스로 다른 글에서 ‘촛불혁명’의 경험과 3·1 운동 100주년이란 계기를 통해 한국 현대사를 되돌아볼 기회를 가지면서, 중국 현대사를 ‘현대 중국’이나 ‘혁명 중국’이 아닌 ‘100년의 변혁’으로 해석해 보겠다는 뜻을 품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백영서 2021b, 134).

세 사건이 각각 제1부, 제2부, 제3부를 구성하여, 사건의 개관, 주요 쟁점의 심화, 동아시아로의 공간적 확대라는 동일 구조로 반복된다. 유용태의 표현대로라면 이 책은 통사에 일반적인 편년체가 아니라 기사본말체 구성으로, 세 사건은 행위 주체에 따라 구분된다. 목차 제목 ‘신청년과 각 계민중연합의 시대’, ‘당과 인민의 시대’, ‘군중자치의 순간’ 그대로, 100년의 주인공인 ‘민(民)’은 시기에 따라 각각 ‘민중(1919년)’, ‘인민(1949년)’, ‘군중(1989년)’으로 다르게 표현되었다(김하림 2021, 430-431; 유용태 2021, 422-423). 김하림은 이러한 서술 양식을 ‘행위주체의 형성’에 초점을 맞추어 미시사와 거시사를 결합한 통사로 평가한다(김하림 2021, 431).

이 책에 대한 서평은 필자가 수집한 바로는 신문사 서평 이외에, 『역사학보』(유용태), 『중국근현대사연구』(이순이), 『대구사학』(김하림), 『창작과비평』(강진아), 『아시아리뷰』(조문영) 5편이며, 『성균차이나브리프』에 저자가

쓴 소개가 있고,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HK+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과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의 공동 주관으로 “북 콘서트: 백영서 교수의 중국현대사를 만든 세 가지 사건-1919·1949·1989”이 2021년 2월 24일에 열렸다.³⁾

서평자 가운데 유용태, 김하림은 저자의 지도 아래 박사논문을 완성하였고, 재미학자 이순이는 연세대 사학과 제자이다. 한편 이남주는 창비에서 함께 활동하는 진보 진영의 동료이며, 조문영은 한국과 중국을 현장으로 빈곤과 빈민을 연구하는 연세대 동료이다. 필자는 저자와 마찬가지로(故) 민두기 서울대 교수의 지도를 받았고, 함께 책도 여러 편 공저하면서 많은 학문을 입었다.

유용태는 이 책의 첫 번째 미덕으로 변혁론을 꼽았다. 중국사에서는 혁명사관과 근대화사관이 양대 축으로 존재했고, 혁명사를 주선율로 하면서 근대화사관을 절충하는 형태가 가장 많으나, 이 책은 위의 이분법을 넘어서, 혁명론도 근대화론도 아닌 ‘변혁론(transformation)’의 관점에서 통사를 서술한다. 유용태는 세 가지 사건을 책의 키워드에 대입했는데, 필자가 이해하는 바로 풀어서 쓰자면, 중국은 5·4운동을 통해 ‘민(民)의 자율적 결집’(주체)이 이뤄져서, 신중국이 건국하면서 신민주주의라는 방식으로 ‘헌정의 제’(목표)를 추구했었다. 그 목표의 추구는 ‘근대의 적응과 극복이라는 이중

3) https://snuac.snu.ac.kr/?u_event=북-콘서트-백영서-교수의-『중국현대사를-만든-세-가지-사건. 이정훈(서울대 중어중문학과)의 사회로, 토론자로 유용태(서울대 역사교육과), 안치영(인천대 중어중문학과), 이원준(인천대 중어중문학과), 하남석(서울시립대 중국어문화학과), 이정훈(서울대 중어중문학과)이 참여하였다.

과제'를 의식한 것으로, 1953년 사회주의 집단화 이후는 근대 극복에만 치우쳐 근대 적응은 소홀해졌는데, 개혁개방 이후 재개된 이중과제의 추구는 1989년 좌절을 겪는 것처럼 일직선이 아니라 공화의 나선형 발전과정이었다. 1919년은 100년 변혁사를 조망하는 '새로운 민주주의'를 향한 '가치의 관제고지'였고, 1949년은 그런 가치의 냉전기 조건에서의 제도화 실험, 1989년은 개혁개방기 조건에서의 실험이었다. 이 100년의 변혁 과정은 변혁 주체(즉 '민')의 헌정과제 수행이 누적되어 학습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유용태 2021, 422). 유용태는, 저자가 중국 현대사 전공자로서 5·4운동을 다룬 박사논문 이래 거의 30년간 아시아론을 개척하여 국내외에 발신해 왔고, 그동안 그가 펴낸 저서 3부작이 모두 동아시아론이었는데, 그랬던 저자가 동아시아론에서 다시 중국현대사로 돌아왔다고 이 책의 학술사적 의의를 표현하였다(유용태 2021, 425).

평가 역시 유용태의 평가에 십분 공감한다. 자신만의 언어를 철차탁마 모색하여 한국의 중국사 연구 중 독자적 학파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독자적인 학문 영역과 모델을 발신한 점, 이것이야말로 국내 어느 중국연구자와 뚜렷이 구분되는 저자의 업적이고 성과였다고 생각한다. 한편 그 성과로 주장한 동아시아론에서 저자가 다시 중국현대사로 되돌아온 것은, 지난 20년 넘게 서구 모델과 구분되는 문명적 대안으로 동아시아론을 구상하는 데 그만큼 중국의 근현대 역사적 경험과 현실의 변화하는 중국의 지위가 핵심 요소로 작용했음을 증명한다. 즉 1949년의 중국 혁명, 냉전 시기의 사회주의 중국, 개혁개방 이후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닌 중국, 급성장한 중국 경제와 정치적 부상, G2 등장 이후 모델 경쟁에

서 헤게모니 패권 경쟁으로 바뀌고 있는 중국이 한국에서 동아시아론이 제기되고 굴절을 겪는 데 가장 중요한 변수였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바로 이 시점에서 왜 동아시아론에서 다시 중국론으로 돌아오는가, 중국의 귀환이 이뤄지는 배경 역시 오늘날 한국 사회와 지성계가 바라보는 중국이 과거 동아시아론을 제기할 때의 중국과 달라졌기 때문일 것이다. 여러 서평가들이 일치해서 지적했듯이 ‘협중’의 시대에 용기 있게 중국을 다시 바라보고 평가할 것을 요청하는 이 저작은 다른 한편으로는 동아시아론의 입장에서 오늘날 중국을 바라보는 곤혹스러움과 혼란을 보여주고 있다고 느꼈다. 마찬가지로 이 텍스트를 읽는 서평가들의 시선에서 역시 중국을 읽는 감각의 차이가 나타난다.

3. 텍스트를 읽는 착종하는 눈(1)

1) 문혁과 자본주의

먼저 많은 서평가들이 사회주의 집단화 시기 중국에 대한 저자의 평가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저자는 1953년 이후 신민주주의의 종료와 사회주의 집단화 이후를 근대 적응과 근대 극복의 이중과제에서 사회주의화를 통한 근대 극복으로 균형이 무너지며 근대 적응은 홀시되고 이중과제의 추구는 쇠퇴했다고 보았다. 유용태는 그렇게 보면 근대 적응, 근대 극복이라고 했지만 사실 극대 적응=근대화, 근대 극복=혁명이 내용이 되어버려,

기존과 같은 혁명과 근대화 사관을 통합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새로운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의문을 던졌다(유용태 2021, 427). 한편 김하림은 바로 이 기간에 대거 (1989년에 앞서) ‘군중’이 등장하는 문화대혁명에 대한 평가가 저서에는 없다고 비판한다(김하림 2021, 441). 이남주 역시 저자가 1957년 이후 문화대혁명까지 국가의 억압적 성격이 강화되었다고 평가한 것에 대해, 이 시기의 군중노선을 단순화하여 부정(否定)한 개혁개방 이후의 정치안정 담론이 결국 1989년 천안문 운동을 좌절시키지 않았냐면서, 군중노선의 긍정적 계승을 주장하였다(이남주 2021, 500).

김하림과 이남주의 비판대로라면 적극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1949년의 신민주주의의 노선보다 문화대혁명이 1989년 천안문과 연결되게 된다. 미묘하지만 그러한 복선은 두 사람 모두 저서가 ‘민의 자치와 결집’이나 ‘새로운 민주주의’에서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본격적 비판이 없음을 언급하는 것에서 구체화된다. 이남주는 현대 중국사에서 자본주의 극복의 가능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시도가 ‘민의 자치와 결집’과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았다고 했는데(이남주 2021, 500), 김하림 역시 ‘민의 자치와 결집’과 ‘공화의 실질화’ 양자의 결합 관계에서 ‘정치민주’와 함께 ‘경제민주’의 과제 역시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데 저서에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김하림 2021, 440-441). 김하림은 자본주의/서구를 비판한 1930년대 통제경제론을 연구하고 있고, 따라서 당시 중국 지식인들이 근대 극복을 위해 자본주의 체제가 아닌 비자본주의 경제를 구상했던 것을 저자의 대안 모델 내에서 적극적으로 드러내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 즉 ‘민의 자치와 결집’에서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열등한 지위에 처할 수밖에 없는 ‘민’들이 적극적

으로 비자본주의의 길/경제민주를 주장했음을 보여주면, 서구 극복=반식민지의 저항이 어떻게 ‘민의 자치와 결집’을 추동하고 동력이 되었는가를 합리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지 않냐는 질문인 듯하다.

이순이는 다른 각도에서 1953년 이후에 대한 해석에 비판을 집중하였다. 즉 1953년 신민주주의의 종결과 사회주의화는 서구 자본주의 진영이 한국전쟁 이후 봉쇄 조치로 억지로 중국을 세계체제에서 분리시키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길이었으며, 또한 이에 맞서는 ‘민족주의’적 반발이며 도전이었다고 본다. 또한 1953년 이후 대약진도 철 증산의 구호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영국과 미국 따라잡기였으며, 근대 극복은 외피이고 방식은 사회주의적이지만 여전히 근대 적응 노력이 아니냐는 것이다(이순이 2021, 182). 여기까지는 이순이의 비판 방식이 다른 서평자와 다르지만, 결론은 마오 시대에도 근대 극복뿐만 아니라 근대 적응 노력이 있었으며 사회주의 시기에 이중과제의 긴장=변화의 동력이 유지되었다고 하여 사회주의 중국 시대에 대한 저자의 낮은 평가를 지적하는 면에서 동일하다(이순이 2021, 182). “요컨대, 이중과제론의 입장에서 반(反)자본주의적, 혹은 혁명적 사회주의적 근대성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저자의 부연설명이 듣고 싶다”(이순이 2021, 182)고 질문을 던지는데, 결국 반자본주의의 길에 대해 적극적 평가를 요청하는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민’이라고 크게 뭉뚱그린 사람들에게 자본주의 경제의 근대화 노선을 장밋빛으로 보여주고 설득하는 것, 반대로 비자본주의적 길을, ‘신민주주의’에서 인민공사 수준의 ‘사회주의 집단화’까지 정도 차는 있으나 더욱 장밋빛으로 보여주는 경쟁은 ‘지식인’=혁명당의 몫이었다. 그

런 면에서 ‘민’을 비자본주의 지향으로 마냥 분류할 수 없었고, 그저 애매하게 ‘민의 자치와 결집’인데 그들이 원하는 내용은 근대 극복과 근대 적응 둘 다였다고 저자가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2) 민이란 무엇인가

결국 ‘민’을 규정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저자가 역사의 주선율, 행위주체로 규정한 ‘민’에 대해서는 다수의 강한 긍정과 소수의 비판이 혼재되었다. 유용태, 김하림, 이순이, 이남주 모두 ‘민’을 역사의 행위주체로 통사를 설명한 것에 이견 없이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 특히 이남주는 저자가 말하는 역사의 주체로 결집하고 자치하는 ‘민’이 자유주의적 개인을 넘어서는 존재임을 특기하여 평가한다. 이남주의 정리에 따르면, 저자의 ‘민’이란 “현실에 존재하고 있는 주체가 아니라 구체적 실천 과정에서 형성되어가는 주체이다. … ‘민’은 근대적 주체일 뿐만 아니라 근대 극복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저자가 제도와 법에 의한 다스림인 ‘정치’, 지도자의 ‘덕치’를 넘어서 민중 개개인의 도덕적 수양에 기초한 ‘도치(道治)’를 강조한 연유도 여기에 있다”(이남주 2021, 498-499). 이남주는 저자가 강조하고 싶었던 바를 정확하게 짚었다고 보는데, 오히려 필자는 가장 의문스러웠던 부분이기도 했다.

저자의 책을 읽든, 이남주의 정리를 참고하든, 글에서 나타난 ‘민’, 그리고 세 가지 사건의 실행 주체는 개인이 아니라 ‘각성된 민중’이다. 좀 더 실체적으로 말하면 자신이 ‘민’을 대변하거나 혹은 ‘민’이라고 생각했던 지식 청년들과 일부 운동에 참여한 ‘각성’한 비지식인 계층이다. 뒤집어 말하면

단련되지 못하고 각성되지 못하는 ‘민’이 있다는 말이다. 마치 각성과 비각성의 구분은 유교에서 ‘사(士)와 ‘서(庶)’의 구분을 연상시키고, 공산당원과 비공산당원을 상기시킨다. 이러한 구별과 자격 부여가 발생하는 순간 지배 정당성의 논리가 발동된다. 과연 요코야마 히로아키(横山宏章)가 비판한 중국 정치의 ‘현인지배(賢人支配)’의 ‘선정주의(善政主義)’ 전통, 손문이 주장한 ‘선각자에 의한 후각자의 지배’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강진아 2014, 289-290)? 누가 각성 내지 ‘근대와 근대 극복의 주체’의 자격을 평가하는가? 예전의 구분법과 다른 점이라면 저자는 유교나 사회주의가 아니라 한국의 사상을 적용했다는 점일 것이다. 즉 한국의 ‘인내천(人乃天)’과 ‘원불교’ 사상을 이용하여, 지도자의 ‘덕치(德治) 외에 ‘민’이 스스로 수양하고 각성하는 ‘사회적 영성’이 중요함을 설파하여 이를 ‘도치(道治)라고 불렀다(유용태 2021, 425). 그러나 이 ‘덕치’, ‘도치’가 유교, 사회주의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수양과 영성의 성숙도는 누가 평가하는지 여전히 알 수 없다. 오히려 모호한 기준이야말로 기준을 결정하는 주체에 무한한 도덕적 정치적 권력을 부여한다. 애초에 서구적 가치 대신에 중국과의 대화를 위해 한국의 사상 자원 중에서 발굴한 노력이 아닐지, 또한 중국 지식인들이 과연 이에 진지한 관심을 보일지 의심스럽다.

‘민’에 대한 비판은 인류학자 조문영에게서 다른 형태로 발견된다. 조문영은 저자의 이력에서 나오는 실천적 접근이 ‘민’의 규정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물으면서, 사실상 ‘민’이란 자연 상태로 원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발견되고 발명되는 존재임을 지적하고, 저자의 ‘민’ 역시 부동의 객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저자가 ‘민’으로 호명한 개념임을 강조

하였다. 그런데도 저자 자신이 그 점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민’을 발견하는 집단과 ‘민’으로 호명되는 집단 사이의 긴장이 책에서는 안 보인다는 것이다(조문영 2021, 297-299). 그리고 가만히 보면 저자가 염두에 두는 ‘민’은 사실 학생 주체인데, 책 속에서는 ‘지식 청년’인 학생은 ‘민’ 그 자체라기보다 ‘민’을 발견하는 주체로 등장한다(5·4시기 지식청년의 “평민” 발견). 그러므로 조문영은 학생·지식인은 과연 ‘민’에 속하는가 아닌가 압박하여 묻는다(조문영 2021, 300).

1949년과 1989년 단계에는 학생과 ‘민’이 구분되지 않았을지 모르나, 5·4시기 학생은 ‘평민’을 발견했으나, ‘민’은 ‘서민’이자 중국인 군체(群體)를 가리켰다. 지식인들은 새로운 변혁 주체로 ‘민’에 희망을 걸면서 동시에 ‘민’의 봉건적 근성을 들어 중국인은 아직 낙후되었다는 ‘국민성’ 담론을 제기하며 불신했다(조문영 2021, 302-303). 그런데 저자는 5·4 시기 지식인들의 ‘민’에 대한 이중적 시선을 언급하지 않을뿐더러, 과연 신중국 성립 이후 ‘인민’ 주체의 등장 속에서 이 문제가 해소되었는지, 되었다면 어떻게 해소되었는지 역시 해명하지 않는다. 책 속에서 ‘민’의 대부분인 농민이 등장하지 않는 것도 단점이다(조문영 2021, 304). 유용태가 저자가 ‘반식민지’ 과제만을 강조하고, ‘반봉건’ 과제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비판한 부분과도 맥락이 통한다고 하겠다(유용태 2021, 426).

여기에서 조문영은 더 나아가 마오쩌둥에 대한 평가로 나간다. 지식인들이 ‘민’의 낙후성을 비판하거나 회의할 때 이를 싫어했으며, 지식인들이 비판하는 속성이야말로 혁명의 잠재성을 보여준다고 옹호한 사람으로 마오를 평가하는 것이다(조문영 2021, 304). 또한 “국가 통치에 있어 교육받은

엘리트의 역할을 강조했던 소비에트식 사회주의와 달리, 마오식 사회주의는 혁명 투쟁과 경제 발전을 이끄는 핵심 세력으로서 인민의 의지와 잠재력을 부추겼으며, 발전의 객관적 힘을 강조했던 정통 마르크스주의와 달리 인민 대중의 의식과 도덕성, 행동에서 역사의 결정 요인을 찾고자 했다”(조문영 2021, 305)고 모리스 마이스너를 인용하여 평가하는데, 마이스너는 바로 위와 같은 맥락에서 개혁개방 이후 중국공산당을 비판하고, 문혁을 긍정 평가하는 사학자이다.

조문영은 이 책이 ‘민(民)’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젖혔다고 말한다. 저자가 서구를 민주주의의 표준으로 삼기를 거부하는 한편, 당-국가가 ‘민’과 ‘민중’이란 어휘를 지배 정당화에 남용하는 것도 반대했다고 평가했다. “양자와 거리를 두면서도 민주라는 화두를 끈질기게 붙들고, 5·4기 사회변혁적 자아의 출현을 복기하면서 개인의 수양이 사회적 영성의 집단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출로를 모색”하려 했다고 평가하였다(조문영 2021, 305).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민(民)’과 ‘민주’에 대해 선협적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다른 출로에 대한 상상을 닫아버린 것은 아닌지” 의문을 던졌다(조문영 2021, 306). 그리고 “지구상의 수많은 생명이 지배자에 의해서든 지식인에 의해서든 ‘민’으로 호명되고, 국가와의 관계를 통해서만 인정의 자리를 부여받는 이 시스템” 이외에는 없는지 묻는다. 그러면서도 거대한 불평등의 시대에 ‘민’이라는 이름으로 호명되어 국가와 상대하지 않으면 각자도생만으로는 희망이 없으므로 결국 저자의 ‘민’의 가치를 버릴 수는 없다고 맺는다(조문영 2021, 306).

이에 비해 필자는 저자의 책에서 사실상 ‘민’을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20세기 내내 역사 속 문명제국의 영광과 근대국가 경쟁에 뒤쳐진 열패감 사이에서 고민했던 지식인, 청년들이 이 책의 주인공이다(강진아 2021, 449)”라고 정리했었다.

4. 텍스트를 읽는 착종하는 눈(2)

1) 서구도 혁명도 아닌 대안: 새로운 민주주의

저자는 ‘민’이 ‘현정의제’로서 근대에 적응하면서도 극복하는 새로운 민주주의를 모색하는데 세 사건에서 세 가지 요소를 그 사상적 경험적 자원으로 높게 평가했다. 1919년 5·4에서는 정당을 대신해 민의를 결집했던 직업단체를 비롯한 각계 사회단체들이 형성한 각계민중연합이다. 1949년 건국에서는 연합정부와 혼합경제의 신민주주의, 1989년 천안문 사건에서는 밑으로부터의 민주 자치이다(김하림 2021, 434-435). 이 세 가지의 역사적 동력은 저자는 모두 중국 내부에서 단련되고 모색된 것으로 높게 평가했다.

유용태 역시 이 책의 학술사적 의의를 중국 내부에서 만들어진 가치를 발굴했다고 평가하는데(유용태 2021, 423), 특히 ‘각계민중연합’을 서구식의 회민주주의와 다른 중국 내부에서 형성된 민중의 자율과 자치로 ‘새로운 민주주의’로 높게 평가하고 있다(유용태 2021, 423). 유용태는 각계연합의 대표들이 결집하여 민의를 형성하는 사회 관행이 정착되고, 그 연장선에서 유럽의 이론을 수용해 만들어진 대안적 민의기관 모델이 중국의 직업대표

제라고 평가한다. 이 원리를 정부형태 설계에 적용한 것이 연합정부이고 경제체제 설계에 적용한 것이 혼합경제라는 것이다(유용태 2021, 424). 이렇게 보면 5·4 시기의 ‘각계민중연합’과 신민주주의하의 직업대표제는 같은 수준에서 ‘새로운 민주주의’의 내용이 된다. 이에 반해, 저자는 ‘민’의 자발적 결집에 의한 국민회의식 직능대표제를 중시하면서도 “공산당은 선거기피 문화가 있어 서구민주주의에 대한 안티로서 지역대표제보다는 직능대표제를 선호했다”고 썼다. 유용태는 이 기술에 반발하여, 원래 직업대표제는 영국 길드사회주의자들이 자산계급 편향의 정당 중심 의회제/지역대표제를 비판하면서 대안으로 제기한 모델이라며 ‘새로운 민주주의’의 한 형식으로 적극 평가했다(유용태 2021, 427).

이 논쟁을 보면서 첫째, ‘각계민중연합’이 ‘민의 자치와 결합’인지, 둘째 과연 중국 내부에서 만들어진 모델과 역량인지, 셋째 직업대표제가 ‘각계민중연합’을 계승하는 ‘새로운 민주주의’인지 의문이 들었다. 근대의 각 직업단체는 전통 길드와 행업과 같은 지역 단위의 이익집단 성격을 강하게 띤 것도 있고, 학생운동 조직처럼 혁명 조직으로 전화하기 쉬운 행동적 준(準)정치조직도 섞여 있었다. 심지어 노동자단체라고 할지라도 한국노총과 민노총이 다른 것처럼 성격이 천차만별이었다. 게다가 ‘각계연합’의 가장 중요한 일원 중 하나인 상인계층의 행업단체는 자율적 단체라기보다는 누구나 가입해야만 영업 활동이 가능하다는 면에서 타율성 역시 적지 않았고, 이른바 ‘자치’는 때로는 이윤 확보를 위한 외부 세력의 거부였다. 또한 직업대표제가 원래 길드사회주의자들의 모델이었다고 한 것처럼, 중국의 신민주주의 역시 전후 동유럽과 사회주의 신생국에서 막 탄생한 인민민주

주의와 상당한 유사점을 가진 것을 감안하면, 과연 어디까지가 중국 내부의 근대 적응-근대 극복의 대안적 모델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마지막으로 유용태는 저자의 '선거 기피와 직능대표제 선호' 주장을 비판하면서, 직업대표제 역시 지역대표제처럼 유권자의 직선으로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선거단위가 지역이 아닌 직업/직능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는데(유용태 2021, 427), 신민주주의 시기의 직업대표제는 사실상 자유 직선제가 아닌데도 이러한 반박이 유효한가? 혼합경제 역시 사회주의 경제와 자본주의 경제의 혼종으로 제시한 것이며, 1920년대 이래로 중국 사회 상층부의 지식 엘리트 내부에서 그것도 서구의 학술 논의와 경험에 자극을 받으면서 제련된 것이다. 지식계층이 그 내용 안에 '민'을 집어넣었다고 해서, 그것이 왜 민의 자율적 결집과 자치가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앞서서도 지적했지만 5·4 시기의 지식인이 '민'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하여 정체성이 '민'이냐고 물으면 답변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민'과 일체를 주장한 공산당원조차도 당과 당원의 지도성을 무한 긍정한다는 면에서 사실상 전통 시대 '사(士)' 의식의 논리 구조를 반복한다.

저자는 근대에 적응하고 극복할 '새로운 민주주의'가 무엇이라고 확정하지는 않았다. 목적을 포기했기 때문에 다만 변혁(transformation)을 역사를 설명하는 데 사용했을 뿐이며, "특정 모델로 가는 직선적 진화 과정(곧 이행(transition))이 아니라 새롭고 알려지지 않은 무엇인가로 가는 변화"(백영서 2021a, 16)로 규정했는데, 그것은 사실 아무것도 말하지 않은 것일지 모른다.

2) 동아시아론은 어디로?

인류학자 조문영과 증문학자 이정훈은 저자의 책을 어느 정도는 동아시아론에서의 후퇴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역사학 전공자의 비평가들이 “중국 현대사라는 역사학적 문제의식은 물론 동아시아론과 그 속에서 버려진 사회인문학의 실천적 관점이 종합된 산물”이며, “저자가 민두기/리영희 선생을 마치 ‘새의 두 날개’와도 같은 스승으로 삼아 지적 균형을 취하면서 양쪽의 장점을 융합하고자 힘써온 발분의 소산”(유용태 2021, 426), 혹은 동아시아론에서 펼쳤던 주장들과 한국의 사상 자원을 길어 올려 중국을 향해 “중국 바깥의 사상과 경험”을 학습할 것을 제안한 진일보한 연구(김하림 2021, 432), 동아시아론의 성과를 바탕으로 “중국 현대사를 지역적, 전지구적 맥락 속에서 일관되게 해석한 이 책은 초국가적, 전 지구적 역사 연구의 모범을 제시”(이순이 2021, 178)한 것으로 높게 평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조문영은 저자가 전작인 『핵심현장에서 동아시아를 묻다』처럼 중국의 국민국가로서의 위상, ‘하나의 중국’이라는 신화에 근본적으로 도전하지 않는다면(조문영 2021, 297), 책의 배경이 되는 베이징은 전작에서 국민국가의 틀을 넘어서고 위계질서에 억눌린 주변의 눈을 얻을 수 있는 ‘핵심현장’(대만, 오키나와 등)과는 대척점에 있음을 지적한다. 전작에서 “국가 간 결합 양상이자 국민국가의 자기 전환의 한 양상”으로 파악했던 ‘복합국가’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조문영 2021, 297). 조문영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에서 주최한 북콘서트에서 증문학자 이정훈은 역사학자이자 동시에 동아시아 담론의 주요 논자이기도 한 저자가 “‘복합국가론’의

상상을 이 책을 통해 중국현대사에 대한 대안적 재구성에 투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까지 확장하지는 않은” 까닭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고 하는데(조문영 2021, 297), 비슷한 맥락이다.



지금까지의 이 책과 서평에서 진행된 논의를 살펴보자면 왜 동아시아론이 사라지고, 중국이 다시 귀환했는지 시사하는 바가 있다. 근대 극복과 서구가 아닌 평화 공존의 대안 모델을 자처하던 동아시아론의 서사는 여전히 사회주의 중국의 비자본주의적 역사 경험에 가졌던 친근감을 유지하면서, 이 책에서 ‘문혁과 비자본주의에 대한 관심’이, ‘탈중심과 탈국민국가의 진술’이 부족했다고 지적한다. 지적에서 구사하는 어휘와 논리가 지난 20여 년의 동아시아 담론과 크게 변한 것이 없다.

적어도 ‘위기지학(爲己之學)’으로서 한국이란 현장을 잘 보기 위해 공부한다고 자부하는 저자는(최은진 2016, 12), 필자의 어설픈 이해일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동아시아론이란 프리즘을 통해 중국을 보기보다 중국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 것 같다. 저자는 다른 인터뷰에서 한중간 지적 비대칭성을 지적하고, 중국 담론에 한국 학자들이 한국 사상사의 맥락에서 자기 이론을 가지고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중국 지식인들이 한국에도 일본에도 별로 관심이 없다고 토로한 바 있다(최은진 2016, 27, 29, 32). 아마도 그러한 고민에서 이 책에서 저자는 더 이상 중국에게 동아시아론에 들어와서 논하자가 아니라, 중국이 ‘강해지기’(부장론)를

넘어 ‘문명화하기’(문명론)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그러려면 한국 원불교의 3종 치교(治敎)와 동학(東學)의 인내천 사상을 참고하여 ‘공화(共和)’를 재구성하자고 권한 것이라고 읽혔다. 이순이는 저자의 궁극적 주장을 “(지구적 규모의 신자유주의가 조성한)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꺾어서 볼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춘 (사회변혁적 자아의 고양된 형태인) 사회적 영성을 집단적으로 회복하여야 ‘개인들이 힘 있는 주체가 되고 세력화된 민주주의,’ 곧 한층 급진적인 ‘강화된 민주주의’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고 풀어썼는데(이순이 2021, 190-191), 저자는 촛불혁명에서 보았던 것을 중국에게 권한 있다고도 보인다.

5. 맺음말을 대신하여: 중국의 귀환, 극단화되는 중국론

글을 마무리하면서, 동아시아론이 아직 왕성할 때, 해외에서 일국사관에 비판적인 학자로 이름을 알리던 사카모토 히로코(坂元ひろ子)가 저서 『중국민족주의의 신화: 인종, 신체, 젠더로 본 중국의 근대』의 한국어판에서 쓴 문장이 떠오른다.

‘탈아시아’ 이후의 일본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불변의 ‘중화사상’이라는, 중국에 대한 일본의 콤플렉스를 뒤집어 중국을 담론화하고 있다. 이는 이질적인 문화에 대해 자신의 문화를 특권화하면서, 너무나 간단하게 이해할 수 없는 ‘타자’로서 특수화하는 것이다. 이질적인 문화를 지닌 사람들에게 대한 자신의 무지와 콤플렉스에서 도리어 그들을 ‘야만’ ‘불량배’로 보게 되고, 그러한

나라와 민족을 ‘민주화’와 ‘해방’이라는 명분 아래 무력으로 침략하는 것에 대해 비판 능력이 없는 사조가,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도 포함된 세계의 곳곳을 뒤덮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그 위험성은 분명히 드러난다. 이러한 근경에서 벗어나기 위한 사상적 시도로서 중국의 근대를 공시(時)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적절한 연습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사카모토 히로코 2006, 10).

이 책의 한국어판이 출간되기도 전에, 백영서 교수는 일본의 『사상』 잡지에 서평을 쓴 바가 있고, 두 사람의 생각은 공명하는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같은 한국어판 서문에서 이 책의 역자들은 사카모토의 중국사학자 프랭크 디콰터(Frank Dikötter)에 대한 비판을 소개하는데 대단히 흥미롭다. 아직 디콰터가 일반에까지 유명해지기 전이다.

사카모토는 미조구치와는 정반대 방향에 서서 내재적 일국 사관에 근거하여 근대 중국의 인종 차별 의식을 화이 의식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하는 미국의 중국 연구자 디콰터(F. Dikötter)에도 비판적이다. 디콰터는 근대 이후를 전통적인 화이 의식의 자기 전개로 본다. 사카모토는 디콰터의 이런 주장을 ‘중국 국민성’론으로 귀착되기 쉬운 논리로 본다. 이 안에는 유럽 중심 사관과 더불어 내재적 일국 사관이 숨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들의 입장은 모두 어찌 보면 자생적 근대와 외래적 근대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한 결과로서 나올 수 있는 논리이다. 그리고 이 결과는 중국 특수론과 같은 허상을 만들어 내기 십상이고 더 나아가서는 구미나 일본의 과거 청산문제에서 역사적 책임을 면하게 해 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사카모토 히로코 2006, 15).

사카모토의 생각을 길게 인용한 이유는 동아시아론과 화평 담론이 융성 하던 당시에 그녀가 염려했던 복류해 있던 국민성론과 중국특수론이 오늘날 좌우 양측에서 시각을 달리하여 극단화된 형태로 왕성하기 때문이다. 중국론의 화려한 귀환이다.

위에는 미국학자라고 했지만 오류이고 프랑크 디코터 교수는 네덜란드 출신으로 런던 SOAS에서 공부하고 현재는 홍콩대학에 재직하면서 신중국 건국, 대약진, 문혁을 통렬히 비판한 인민 3부작(The People's Trilogy)으로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다. 그가 이러한 행보를 보이기 전에도, 그가 중국의 전통역사의 속성, 즉 '내재성'을 현재를 규정하는 DNA로 해석하고 일종의 불변론을 펼치는 경향이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홍콩 민주화운동을 지지하고 공산당을 에누리 없이 비판하는 과감한 행보로 유명한 그는 최근 제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의 3연임이 결정된 뒤, 어느 온라인 잡지와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공산당은 개혁의 희망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결론 지었다.⁴⁾ 서구 민주주의의 입장에서 서 있으나 결국 중국의 개혁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최근 일본학계의 경향이기도 하다. 일본학계는 국민성론에서 더 나아가 일종의 문명론으로 나간다. 중국 해관(海關) 연구와 동아시아 근대 외교사, 속방론(屬邦論) 연구에서 뛰어난 업적을 쌓은 오카모토 다

4) 이 인터뷰에서 그는 현재 홍콩은 전 세계에서 상하이, 베이징보다도 “중화인민공화국(PRC)에 더 가까운 곳일 것이라고, 단 북한은 빼고”라고 언급했는데, 그런 곳에 살면서 과감한 인터뷰를 마다하지 않았다. https://thechinaproject.com/2022/10/28/there-is-no-hope-the-communist-party-can-reform-qa-with-frank-dikkoter/?utm_source=SupChina&utm_campaign=8d4aff8642-EMAIL_CAMPAIGN_2022_10_28_08_53&utm_medium=email&utm_term=0_03c0779d50-8d4aff8642-166197912.

카시(岡本隆司)는 최근 신작 『교양으로서의 중국사』를 출간하였다. 아마존 평점 4점 이상을 기록하는 베스트셀러가 된 이 책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중국을 말한다.

현대 중국의 법은 인민 위에 군림하고 있지만 공산당 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즉, 중국은 주권재민(主權在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여기서 주권재민이 올바르고, 중국의 방식이 잘못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러 가치관 중에 하나를 택해서 옳다고 밀어붙이는 것도 역시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일본인은 우연히 영국에서 생겨난 법치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럭저럭 나름대로 잘 적응했기 때문인지, 이 시스템이 제일 덜 해로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세계는 그런 곳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스템의 장점을 실감할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런 사람들이 긴 역사 속에서 만들어 온 정치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좋고 나쁨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 같은 법치국가로 생각하고, 법률 기준만으로 헤아리려고 하니, 서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중국은 공산당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부터 싫어졌다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역사를 보면 중국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뇌물과 횡령이 판치는 것도, 국제적 룰(rule)을 무시하는 것도, 갑자기 태도를 표변하는 것도 중국 공산당부터 시작된 일이 아닙니다. 원래 중국은 그런 나라입니다(岡本 2020, 243-244).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일본인보다 훨씬 혈연과 지연을 소중히 하는 것

입니다. 자신들의 혈육, 가족 간의 약속은 굉장히 잘 지키는데, 반대로 거기서 한 걸음 나가면 전혀 상관 안 합니다. 타인이 정한 규칙[rule]이나 국가가 정한 규칙[rule]은 지킬 필요도 없고, 지키려는 마음조차 없습니다. 아무래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법을 어기고도 태연한 겁니다(嗣本 2020, 246).

아예 다른 문명이므로 대화로 소통할 생각을 하지 말자는 완벽한 단절이다. 그렇지만 이웃이니 각자 살자, “나는 나, 너는 너”이다.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근거는 역사와 문명의 총합이다. 한자, 유교, 지정학 모든 요소가 중국의 남다름을 설명하는 데 등장하는데, 문제는 현재에도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디코터와 오카모토에서 발견한 단절은 새뮤엘 P.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에서 이미 나왔던 것이지만 동양학자 스스로 전개한 것이므로 역사적으로 훨씬 정교하고 탄탄한데, 앞서 사카모토가 지적한 것처럼 1930년대 일본의 ‘탈아론’ 전개에서 등장했던 단절적 중국론과 내용상 대동소이하다.

흥미롭게도 똑같은 단절이 중국공산당의 ‘중국특수론’에서 나온다. 서두에서 『동북아 포커스』에 썼던 글을 비록 관방이지만 중국 측 인사들과 공유할 기회가 있었다. 지난 10월 19일에 영남일보와 경북대의 공동 주최로 ‘한중 수교 과거 30년, 미래 30년’이란 주제로 수교 30주년 기념 포럼이 열렸다. 그 현장에서 역시 한중이 미래를 평화롭게 공영공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가치’ 논의에서 열린 태도로 논의할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발표자(필자)와 플로어의 의견에 대해, 중국 측 참가자 및 발표자는 중국의 ‘민주’와 ‘가치’는 중국 특유의 것이므로, 서구 기준을 따르는 한국의 기준

을 강요하지 말라는 답변으로 소통 가능성을 아예 차단해 버렸다. 표현조차 비슷하게 “중국은 중국의 민주가 있고, 한국과 서구는 당신들의 민주가 있으니 각자 상관하지 말고”, “상호 존중”하자는 논지였다. 그 중국 특유의 민주에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주의 외에 이제 유교를 위시한 전통적 중화 문명이 들어간다. 필자는 보편적 가치란 없다면, 한중을 막론하고 장식처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발표문에 적고 있는 ‘평화(和平)’는 뭐냐고 답변 없는 질문을 던졌다.⁵⁾

최근에 필자의 영어책이 출간되었는데(Kang 2022), 작년에 출간 여부를 판별하는 심사에서 심사자(peer reviewer) 중 한 분이 실명을 밝히고 필자와 지면 논쟁을 벌였었다. 필자는 중국의 재정 시스템이 사회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조세 기능 중에 부의 평준화 기능이 취약하다고 보았다. 한때 필자가 적극 국내에 소개했던 캘리포니아 학파에서 전통 ‘도덕 경제’가 경제에 대한 조세 수취율이 낮은 것만으로 ‘작고 관대한 정부’로 본 것은 마치 현 중국이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조세 수취율이 낮아도 훨씬 불평등한 사회인 것처럼 본질을 놓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 예외주의(Chinese exceptionalism)’는 실체가 없고, 중국공산당이 외부 비판을 차단하기 위해 역사를 빌려 펼친 방어막에 불과하며, 그렇게 따지면 예외가 아닌 국가도 문명도 없다고 했다(강진아 2008; Kang 2022). 심사자가 바로 전통 중국 조세와 지배를 복지국가적 도덕경제로 재평가하고, 서구모델을 반박하기 위해 중국예외주의를 주장하는 캘리포니아학파의 빈 왕(R. B. Wong) 교수였기

5)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21019010002354>.

때문에 양자 간에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이다. 왜 친자본주의적 서구 모델을 극복하는 것이 반드시 전통 중국에 대한 긍정, 내재성에 대한 긍정, 중국공산당에 대한 긍정이 되어야 하는가?

중국과 중국공산당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 중국 모델을 고민하는 것이 중국공산당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해야만 하는 심리적 압박이 될 수 없다. 전근대 이전 중국과 근대 중국, 오늘날 중국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 역사적 문명적 특수성은 물론 중요한 규정 요소이지만, 전근대와 근대의 인류사적 단절만큼 크지 않다. 그런 연후에야 향후 중국이 나아갈 길의 새로운 가능성, 변혁이든 대안 모델이든 편견 없이 지켜볼 수 있다.

『중국 현대사를 만든 세 가지 사건』에서 보이는 저자의 곤혹은 중국과 마주해야 한다는 현실을 적극적으로 인지한 자성(自省)이자, 동시에 어디까지 단절하고 어디까지 놓지 말아야 할지 고민스러운 노학자의 고뇌처럼 보인다.⁶⁾

6) 유사한 중국공산당에 대한 곤혹은 石川禎浩, 『中国共産党、その百年』(筑摩書房, 2021)에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강진아. 2008. “동아시아로 다시 쓴 세계사-포머란츠와 캘리포니아학파.” 『역사비평』, 82. 235-265.
- _____. 2009. “세계체계와 국민국가의 회색지대-동아시아론의 성과와 한계.” 『인문연구』, 57. 69-82.
- _____. 2014. “G2시대의 중국 사회주의.” 『역사비평』, 106. 287-322.
- _____. 2021. “20세기 중국에서 또다른 민주주의를 상상하다: 백영서 『중국현대사를 만든 세 가지 사건』(창비 2021).” 『창작과비평』, 49(1). 449-452.
- _____. 2022a. “두 개의 바퀴, 트랜스내셔널리티와 내셔널리티: 팬데믹 속 한국의 중국현대사 연구(2020-2021).” 『역사학보』, 255. 327-357.
- _____. 2022b. “역사를 넘어서 새로운 아시아의 ‘가치동맹’을 모색하다.” 『동북아역사포커스』, 2. 44-54.
- 김정인. 2020. “다시 여는 100년에 물음을 던지다: 백영서 엮음 『백년의 변혁: 3·1에서 촛불까지』(창비, 2019).” 『창작과비평』, 48(1). 413-416.
- 김하림. 2021. 「《書評》 변혁으로 다시 읽는 중국현대사: 변혁주체와 실천과제 - 백영서, 『중국현대사를 만든 세 가지 사건: 1919·1949·1989』(창비, 2021).” 『대구사학』, 144. 429-442.
- 김향·이혜령 저. 2011. “백영서, 방법으로서의 동아시아.” 『인터뷰 한국 인문학 지각변동』, 8. 88-131.
- 디코터, 프랑크. 2016. (인민 3부작)『해방의 비극』, 고기탁 역. 열린책들.
- _____. 2017. (인민 3부작)『문화대혁명』, 고기탁 역. 열린책들.
- _____. 2017. (인민 3부작)『마오의 대기근』, 최파일 역. 열린책들.
- 박경석. 2018. “한국의 중국현대사 연구와 ‘동아시아담론’-백영서 교수의 중국현대사연구를 사례로.” 『중국근현대사연구』, 77. 255-281.
- 백영서 편. 2019. 『백년의 변혁: 3·1에서 촛불까지』, 창비.
- 백영서. 2021a. 『중국 현대사를 만든 세 가지 사건: 1919, 1949, 1989』, 창비.
- _____. 2021b. “『중국 현대사를 만든 세 가지 사건: 1919·1949·1989』.” 『성균치이나브리

- 프. 9(2). 134-138.
- 사카모토 히로코 지음. 2006. 『중국민족주의의 신화: 인종, 신체, 젠더로 본 중국의 근대』. 양 일모 조정란 옮김. 지식의 풍경.
- 유용태. 2021. “민을 주체로 한 독특한 서사방식의 중국 현대사 - 백영서, 『중국 현대사를 만든 세 가지 사건: 1919, 1949, 1989』(파주, 창비).” 『역사학보』. 249. 421-429.
- 이남주. 2021. “이중과제로 본 현대중국 “백 년의 변혁”: 『중국 현대사를 만든 세 가지 사건』 (백영서, 창비).” 『역사비평』. 135. 496-501.
- 이상훈 교수 발표. 2022년 11월 18일. “사다리 복원하기: 포세신의 위기의식과 ‘사’의 행정 참여 확대 모색.” 2쪽. 미발표 원고. 한양대학교 동양사연구회 발표.
- 이순이. 2021. “100년의 변혁 과정을 통해 읽는 공화의 확충적 실질화를 위한 민의 노력: 백영서, 『중국현대사를 만든 세 가지 사건, 1919, 1949, 1989』 (서울: 창비).” 『중국근현대사연구』. 89. 177-192.
- 조문영. 2021. “‘민(民)’이라는 판도라의 상자: 백영서 지음, 『중국현대사를 만든 세 가지 사건: 1919-1949-1989』(창비)을 읽고.” 『아시아리뷰』. 11(2). 295-307.
- 최은진·박철현. 2016. “중국연구와 동아시아론: 한국의 지성 백영서 선생님과의 대담.” 『중국 지식네트워크』. 7. 5-45.
- 쿤, 필립. 2009. 『중국 현대국가의 기원』. 윤성주 역. 동북아역사재단.
- 岡本隆司. 2020. 『教養としての「中国史」の読み方』. PHP研究所.
- 石川禎浩. 2021. 『中国共産党、その百年』. 筑摩書房.
- Kang, Jin-A. 2022. *The Guangdong Model and Taxation in China: Formation, Development, and Characteristics of China's Modern Financial System*. Amsterdam University Press.
-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HK+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서울대 동아문화연구소 주관, “북 콘서트: 백영서 교수의 중국현대사를 만든 세가지 사건-1919·1949·1989.” 2021/2/24.
“중국 현대사는 변혁 향한 분투의 100년.” 『한겨레』. 2021/1/29.
<https://www.hani.co.kr/arti/culture/book/980932.html>.

“중국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넘어서라.” 『동아일보』, 2021/1/30.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130/105190012/1>.

“1919년 시작된 중국 ‘100년의 변혁’...변곡점마다 험안면의 ‘민’이 있었죠.” 『경향신문』,

2021/2/9. <https://www.khan.co.kr/culture/book/article/202102092014005>.

“가치동맹 경제블록화’ ‘RCEP 아래서 다자주의 견지.’ 『영남일보』, 2022/10/20.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21019010002354>.

“There is no hope the Communist Party can reform — Q&A with Frank Dikötter.”

The China Project, October 28, 2022.

https://thechinaproject.com/2022/10/28/there-is-no-hope-the-communist-party-can-reform-qa-with-frank-dikkoter/?utm_source=SupChina&utm_campaign=8d4aff8642-EMAIL_CAMPAIGN_2022_10_28_08_53&utm_medium=email&utm_term=0_03c0779d50-8d4aff8642-166197912.